



주간통일정세 2011-27(2011.06.27~07.0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27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베일 벗은 '北후계론'...결국 김정은(6/27,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 지난해 9월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해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북한이 27일 북한의 대외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게재한 김일성방송대학의 한 논문을 통해 후계문제에 대한 정리된 견해를 내놓은 게 주목되고 있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주체혁명 위업에 대한 영도의 계승문제를 정확히 이해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작년 당 대표자회를 "주체혁명위업 계승의 일관성을 담보할 근본조건이 마련된 역사적 계기"로 평가해 이 행사가 김정은이 후계자임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사실상 확인
 - 김정은이 작년 당 대표자회에서 대장이라는 군사칭호를 받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름으로써 후계자로 공식화됐다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북한이 작년 행사가 후계문제를 정리한 정치행사라는 점을 반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배경이 주목됨.
 - 논문은 "영도의 계승문제는 나라의 전도와 관련된 시활적인 중대사"라며 "수령의 사상과 영도업적, 품모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어 계승의 문제와 관련해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영도를 계승한다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김일성 주석의 사상과 영도업적, 주석의 숭고한 품모를 그대로 이어받고 빛내어 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해 작년 공식 석상에 등장한 김정은이 김 주석의 헤어스타일과 패션코드를 빼닮았던 배경을 우회적으로 밝힘.
 - 논문은 또 "수령에 대한 순결한 충실성이 후계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징표"라며 "세계사회주의운동사에는 수령이 생존할 때 누구보다 만세를 높이 부른 정치적 야심가들이 영도적 지위에 올라서는 수령의 사상과 노선을 헐뜯고 수령의 업적을 비난하며 말살했다"고 강조했다는데, 이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스탈린 사후 격하운동 등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

- **김정일 "정보전부대는 나의 배짱이고 예비대"(6/28, 연합뉴스)**
 - 북한군은 작년 정찰총국 예하의 사이버부대인 121소를 '121국'으로 승



격하고 사이버전 병력을 3천여 명으로 확대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연합뉴스가 보도

- NK지식인연대 김홍광 대표는 29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한국군사학회와 국방소프트웨어 산학연합회가 주최하는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한국의 사이버전 태세'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힘.
- 또한 김대표는 "121국은 사이버전 지도국으로 남한에 대한 사이버테러와 공격, 민간기관과 단체들에 대한 해킹 및 인터넷 대란을 일으키는 작전을 총괄하는 곳"이라면서 "1998년부터 2009년까지 500여명이었으나 작년 이후 3천여 명으로 늘렸다"고 말함.
- 또 1995년 설립된 100여명 수준의 중앙당 35호실 기초자료조사실은 중앙당 부서에 필요한 다른 나라 국가기관, 단체, 개인에 관한 기밀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해킹하며, 1999년 설립된 200여명 수준의 총참모부 적공국 204소는 국군과 남한의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
- 특히 김홍광 대표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9년 중순 북한군 장령(장성) 간부 강연회에서 정찰국 121소의 해킹 업적을 보고받고 "현대전쟁은 기름전쟁, 알(탄약) 전쟁으로부터 정보전쟁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제국주의를 한 방에 궁지에 몰아넣었다. 정보전부대는 핵무기와 함께 나의 배짱이고 예비대"라고 역설
-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관련해 김 대표는 "북한 국방과학원은 과학기술발전 3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2년까지 '빛-자기변환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라면서 "이 기술이 개발되면 원격지에서 접근이 어려운 인트라넷(내부 전산망) 침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함.

● 北, 천안함·연평도-비핵화회담 분리 거부(6/28, 민주조선)

- 북한은 28일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남북 비핵화회담을 분리해 대응하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거부
-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너절한 잔꾀에 누가 속겠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천안호, 연평도 사건을 걸고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조미대화과 6자회담 재개에 제동을 걸려는 역적패당의 속심은 변하지 않았다"며 남한 정부의 분리대응 입장을 "내외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잔꾀"라고 비난
- 또한 민주조선은 "며칠 전 괴뢰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6자회담 괴뢰 대표 위성락, 돈봉투 사건으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숨어 지내던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도 저마다 미국 상전들을 찾아가 천안



호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6자회담 재개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앙탈질했다"고 비난

● "김정일-메드베데프 30일 정상회담"(6/28, 교도통신; NHK; 마이니치신문)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30일이나 다음 달 1일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짐.
- 교도통신은 28일 러시아 관리들을 인용,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교외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실현되면 2002년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9년 만에 첫 방러 정상회담이 됨.
- 이와 관련, NHK방송도 김 위원장이 오는 30일 열차편으로 북한과 접경 지역인 하산을 통해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하산의 행정부 당국자는 이 방송에 "김정일 위원장이 탄 열차가 30일 즈음 하산역을 통과한다는 연락을 27일 공식적으로 받아, 김 위원장 일행을 맞이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함.
- NHK는 그러나 과거에도 러시아 극동에서 김 위원장을 맞을 준비를 했다가 무위로 그친 적이 있었던 만큼, 실제 방문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임.
- 이날 마이니치 신문은 "북러 양국이 다음달 1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
- 이 신문은 모스크바발 기사에서 북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의 정세 안정을 위해 북한과 관계 강화를 노리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경제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 南군부대 구호 비난... '보복성전' 위협(6/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근 남한의 일부 전방부대가 훈련을 위해 호전적인 구호를 내건 것을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보복성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함.
- 북한은 이날 정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최근 괴뢰군 '백골부대'를 비롯한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대와 체제, 존엄을 중상모독하는 구호를 내걸고 반공화국 적대감을 고취하고 있다"며 "또 다시 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 망동을 감행했다"고 비난
- 이어 "표적사건보다 더욱더 극악한 도발행위를 감행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정면도전으로 명백한 선전포고"라며 "이명박 패당이 감히 전쟁



을 불사하는 극단의 도발을 걸어온 조건에서 도발에는 단호한 징벌로, 전쟁에는 무자비한 보복성전으로 대답해 나설 것"이라고 위협

- 북한은 "이명박 패당은 당장 사죄하고 주모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무분별한 대결 광란을 걷어치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함.

● "김정일 리 방문 포기는 건강상 이유"(6/29, 교도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무산된 것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
- 이 통신은 북수의 러시아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측이 러시아에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방문 취소를 통보했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국방위원장은 특별열차로 30일 국경을 넘어 블라디보스토크 교외 영빈관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
-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을 의제로 제시했고, 북한은 연료와 식량 지원을 요구했으며, 양 측이 의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은 김 국방위원장의 방문 중단을 러시아 측에 통보
- 이에 앞서 지난 2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가스프롬사의 알렉세이 밀레르 사장과 북한의 김영재 주 러시아 대사의 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부설 계획을 정상회담의 의제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 측이 이를 거부

● 김정일, 후진타오에 '공산당 창건 90주년' 축전(6/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30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국가주석에게 중국공산당 창건 90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 위원장은 창당 90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축전을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귀당의 전체 당원들과 중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동지적 인사를 보낸다"며 "당의 창건은 중국혁명과 중국인민의 운명 개척에서 결정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밝힘.
- 위원장은 또 "중국공산당은 자체 실정에 맞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제시하고 광범한 대중의 창조적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짧은 역사적 기간에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를 크게 강화했다"며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를 간접 평가

● 北 "서해 5도 개발'은 또 하나의 도발"(6/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한이 서해 5개 섬을 국제관광지



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또 하나의 도발"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괴뢰패당은 작년에 우리에게 군사적 도발을 걸었다가 불벼락을 맞은 연평도에 '안보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무슨 '안보관광지'를 꾸리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다"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수역인 서해 5개 섬과 수역을 관광상품화하겠다는 것은 화약고 위에 놀이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
- 이들은 또 "서해 5개 섬을 국제관광지로 만들려하는 것은 저들의 범죄적인 북침전쟁준비책동을 가리우고 불법무법의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을 기정사실화하며 서해수역 영유권을 공인받아보려는 것"이라며 "관광객들까지 끌어들이 인간방패로 삼아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결해보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비난

● 북-필리핀, 문화협정 집행계획서 조인(7/1,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필리핀이 1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2011~2013년도 집행계획서에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조인식에서는 북측에서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필리핀 측에서는 펠리페 멘도자 데 레온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집행계획서에 서명

● 北김정일, 김정은과 963군부대 공연 관람(7/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인민군 부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남성중창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합창 '조선청년행진곡' 등을 선보인 이번 공연에는 리영호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 당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경옥·김원홍·김영철·윤정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 등이 수행

● 北김정일·정은, 보위부 가족 등 공연 관람(7/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참가한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이날 공연에는 군 제10215부대(국가안전보위부 대외 명칭) 외에도 제963부대, 조선인민내무군의 군인가족들이 참가
- 김 위원장은 김 부위원장 외에도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



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과 당 중앙군사위원인 김경옥·김원홍·김영철·윤정린, 현철해 국방위 국장 등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힘.

● **北총리, 전력난 속 북창화력발전소 방문(7/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전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영림 내각 총리가 평안남도의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일 전함.
- 중앙통신은 2일 "최영림 총리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생산 정형을 현지에서 요해(파악)했다"며 "총리는 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 보고 협의회를 열었다"고 전함.
- 이어 "협의회에서는 기업소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집중하고 연관단위에서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보장하는 문제를 비롯해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세워졌다"고 덧붙였다.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 내각 총리, 6.23~25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 咸鏡北·南道 공업부문 사업 현지방문 요해 및 '협의회' 조직(6/27, 중통·중방)
- 최영림, 6.27 중국 요녕성 黨 및 정부 대표단과 담화(6/27, 중통·평방)
- 최영림 내각 총리, 6.29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강철생산정형 현지 요해 및 '협의회' 소집(6/30, 중통·중방)

나. 경제

● **美, 1995年後 대북지원 13억弗(6/27, 연합뉴스)**

- 미국이 지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북한에 제공한 각종 지원이 13억 달러 어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6일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간한 '대북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이듬해인 1995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은 금액으로 따져 총 13억1천285만 달러(한화 약 1조4천200억 원)으로 집계
- 미국의 대북지원은 제1차 북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에도 홍수피해 복구 차원에서 60만 달러의 의약품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
- 항목별로는 인도적 식량지원이 총 7억815만 달러(225만8천164t)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 2009년 3월 북한이 구호단체에 대해 떠날 것을 요구한 이후에는 전면 중단된 상태
- 또한 6자회담 합의에 따라 1억4천600만 달러 상당의 중유가 지원됐고,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립됐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관련 비용으로 4억370만 달러, 의약품 등 각종 생필품 지원에 1천만 달러가 각각 투입

- CRS는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식량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는 몇 가지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 먼저 지난해 작황이 비교적 나아졌으나 고질적 식량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상황이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및 권력 승계를 앞두고 식량비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
 - 또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반감이 심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고, 식량지원을 통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
 - CRS는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느냐의 여부와 함께 안보 및 인권문제, 모니터링 확보, 중국의 대북식량 지원 모니터링 문제,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분담 등과도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
- **北 10월17~20일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6/27, 유럽기업협회(EBA))**
 - 북한이 제7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를 오는 10월17~20일 개최한다고 평양 주재 '유럽기업협회(EBA)'가 27일 밝힘.
 - EBA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모집을 알리면서 "조선국제전람회와 함께 유럽기업들을 위한 특별부스를 마련했다"며 미국, 일본, 한국 국적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명시
 - 북한은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에 무역박람회 격인 국제상품전람회를 열고 북한산 기계설비와 강철, 전자제품을 비롯해 식료품과 의약품 등 각종 상품을 선보일 예정
 - **"북한, 목화·피마자 재배 독려"(6/28, 도쿄신문)**
 - 북한이 생활필수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 봄부터 목화와 피마자 재배를 전국적으로 지시했다고 도쿄신문이 28일 보도
 -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내년의 '강성대국' 실현을 위한 국민생활 향상의 최우선 과제로 경공업을 중시하고 있으며 생활용품의 원료 확보를 위해 목화와 피마자 재배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4월초 협동농장과 경제시설에 대해 목화 재배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전국에 지시했으며, 주민 1가구당 피마자 씨앗 30개씩 배급해 가을에 피마자 3~4kg을 헌납토록 함.
 - **경기도2청, 방역물품 7월1일 北 2차 지원(6/28, 연합뉴스)**
 - 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은 다음달 1일 말라리아 방역물품을 북한에 전달한다고 28일 밝힘.
 - 이번에 전달할 방역물품 규모는 말라리아 진단키트 34만3천500개로



3억7천만 원 상당으로 경기도2청은 방역물품을 11t 트럭 1대에 싣고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시와 황해북도에 전달할 계획

- 이번 방역물품 전달에는 인천시도 참여해 같은 날 경기도와 함께 1억 원 상당의 진단키트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함.

● **中, 수풍발전소 개선 후 北에 관리권 이양(6/29, 신화통신)**

- 중국이 압록강 수풍(水豊)댐의 수력발전소 개선공사를 682일 만에 마무리 짓고 관리권을 북한에 넘겼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
- 통신에 따르면 개선공사로 발전소의 홍수조절, 저수, 방수 능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이 공사에 1억5천900만 위안(한화 262억 원)이 소요됐으며, 이는 중국의 국가전력망공사가 전액 부담
- 이 발전소는 북한과 중국의 동북3성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북한과 중국은 지난 1955년 수풍 수력발전소 운영하는 '조·중 수력발전회사'를 공동 설립, 운영

● **스위스 구호단체 "남북갈등에 北식량난 심화"(6/29, 스위스국제방송)**

-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기아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스위스 정부가 운영하는 국제구호단체 대표가 밝힘.
- 29일 스위스 국제방송 인터넷판에 따르면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SDC) 카타리나 켈위거 국장은 최소 350만 명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던 2005년의 상황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식량난이 다시금 북한에서 주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함.
- 이어 켈위거 국장은 한국이 지원을 중단한 이후 비용이 부족해 북한 주민의 농사짓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밝힘.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독재 체제와 3대 세습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서방 각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으며, 현재 유럽 국가 중에서는 스위스와 이탈리아만 대북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 **北, 5월에만 중국서 곡물 5만t 수입(6/30, 연합뉴스)**

- 북한이 5월에 중국에서 5만t이 조금 넘는 곡물을 수입하는 등 올해 들어 곡물, 화학비료 수입량을 부쩍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30일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원장이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하는 북중교역 동향 중 '북한의 곡물 및 비료 수입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서 총 5만328t톤의 곡물을 수입했다. 이는 전월 대비 79.2%, 전년 동기기간보다 31.5% 늘어남.
- 권 부원장은 "북한 식량사정이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콩 수입을 줄인 것은 가격 상승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외화부족으로 옥수수 및 밀가루 등의 곡물 수입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 화학비료의 경우에도 지난달 중국에서 6만7천여t을 수입하는 등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수입량을 늘리고 있으며, 올 들어 5월까지 북한이 수입한 비료의 양은 모두 11만4천300여 t으로 작년 동기기간보다 39% 늘었고 수입액은 2천3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뉴스는 전함.

● "유니세프, 北홍수 대비 10만명분 구호품 비치"(6/30,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니세프(UNICEF)이 올여름 북한의 홍수에 대비해 북한 내 10여 개 군에 10만 여명 분의 긴급구호품을 비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전함.
- UNICEF 동남아시아사무소의 제프리 킬리 대변인은 방송에 이같이 밝히면서 "올여름 북한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홍수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긴급행동령'을 준비하는 등 홍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함.

● 유엔, 국제사회에 대북지원 비공개 호소(7/1,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이 전세계 회원국을 상대로 비공개 모금 설명회를 열고 대북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호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 유엔의 한 관리는 이날 방송에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지난달 27일 전세계 회원국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대북사업을 소개하고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을 설명하며 지원을 당부한다"면서 "대북지원 사업이 각국의 지원규모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
- 벵커 대변인에 따르면 대북 지원 사업은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독일, 스위스 등 유럽국가의 도움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음.

● "중기업, 위화도 개발 추진"(7/1, 중국경제신문)

- 북한과 중국이 황금평과 함께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압록강의 섬 위화도에 대해 중국기업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경제신문이 1일 보도
- 언론에 따르면 2006년 설립된 랴오닝(遼寧)위화도투자그룹은 같은 해 북한과 위화도 국제물류센터 건설 협약을 체결했으며 평안북도농촌관리위원회로부터 200만㎡ 규모의 농업용지 이용 허가도 받음.

● "EU, 2008년부터 北에 3천만 달러 상당 지원"(7/2,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럽연합(EU) 원조협력청이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2천240만 유로(미화 약3천254만461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2일 보도
- 대북 지원 내역을 다룬 유엔 보고서(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DPRK)에 따르면 연도별 지원 금액은 2008년 744만 유



로, 2009년 255만 유로, 지난해 845만 유로로 각각 집계됐고 올 들어 5월까지의 북한에 398만 유로를 지원

- 한편 RFA는 미 국무부가 다음 달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전격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전망

다. 군사

● 북한, 제네바 군축회의 순회의장국 맡아(6/28, 연합뉴스)

- 북한이 28일 시작된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 순회 의장국을 맡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서세평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군축회의에서 "이번 회의가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한다"며 "회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하겠다"고 말함.
- 서 대사는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군축 문제를 조언하는 전문가 그룹들과 회원국 외교관들이 오는 30일 제네바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고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덧붙임.
- 서 대사의 언급에 대해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관계자는 "서 대사의 발언은 순회 의장으로서 의례적인 발언이며,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고 말함.
-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제네바 군축회의는 알파벳순으로 매년 6개 나라가 4주씩 의장국을 맡는데, 이번 회의는 당초 쿠바가 의장국을 맡게 돼있었으나, 자국 사정으로 인해 순서를 바꿔줄 것을 요청해 북한이 의장국이 되었음.

● "北, 스리랑카 타밀반군에 무기판매 시도"(6/29, 미국의소리)

- 북한이 지난 2006년 무기판매를 목적으로 스리랑카 반군세력인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와 접촉했던 사실이 미국 정부에 의해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전함.
- 방송은 미 법무부가 지난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일어난 주요 불법수출 사건 기소사례를 모아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LTTE는 2006년 2월부터 북한과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약 90만 달러 규모의 무기구입을 시도했다"고 밝힘.
- 보고서에 담긴 미 연방 메릴랜드 지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LTTE 요원을 위해 일하던 싱가포르 국적의 발라즈 나이두는 2006년 북한인 1명을 소개받았고 이 북한인은 나이두에게 무기 판매를 시도
- VOA는 앞서 LTTE가 기관총, 대전차로켓 등을 북한에서 구매해왔으며 2005년~2008년에는 무기 구입을 위해 평양 현지에 사무소를 운영, 타밀반군 3명이 상주하기도 했다고 전한 바 있음.



라. 사회·문화

● "北 장마철 수해방지 활동 주력"(6/28,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해 홍수로 신의주 일대에 큰 피해를 본 북한이 올해는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수해방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
-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은 RFA에 "홍수에 대비해 북한 내 유엔기구와 NGO(비정부기구)들이 함께 수해대비 모의훈련과 현장점검 등 방재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힘.
- 이 방송은 IFRC가 북한의 장마철을 7월 말에서 9월 중순으로 보고 산사태 방지 목적으로 지난 3월과 4월 '봄철 나무심기 운동'을 벌여 산간 지역 30여 곳에 약 230만 그루의 묘목을 심었다고 전함.
- IFRC는 상반기에 함경남도, 평안도 지역에 댐, 저수지, 배수로, 우물 등을 중심으로 방재시설 세웠고 시·도별로 '재난대비 위원회'를 조직해 지역 차원의 훈련도 진행하는 한편 지역별로 긴급사태 대비계획을 제공할 계획

● "北 평양 국제공항 신터미널 완공"(6/28, 교도통신)

- 일본의 교도통신은 28일, 북한이 평양 국제공항에 새로운 터미널을 완공해 이달부터 문을 열었다고 보도
- 이 통신은 "(평양 국제공항의 신터미널 완공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인 내년'을 위한 수도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전함.

● 北 "일본 6·25 참전했다"...사죄 요구(6/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비망록'을 통해 일본이 6·25 전쟁에 참전했다고 주장하며 사죄를 요구
- 중앙통신은 "일본은 미국의 대조선 침략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무장장비, 군수품의 수송과 생산보장에서 특등참전국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며 "일본은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해 우리의 평화적 주민을 살해하고 국토를 잿더미로 만든 죄과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성근하게(성실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힘.
- 통신은 이어 "우리 민족은 일본이 과거 조선인민에게 끼친 죄악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일본은 응당 조선전쟁의 패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임.

● "평양에 김정일 비방낙서...보안당국 발각"(6/29, 데일리NK)

- 북한의 수도 평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방하는 낙서가 발견돼 보안당국이 발각 뒤집혔다고 대북매체인 데일리NK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29일 보도
- 데일리NK에 따르면 중국 단둥(丹東)을 오가는 평양의 한 소식통은 지난달 평양 만경대의 김일성 생가 대문 한쪽이 분실된 데 이어 지난 24



- 일에는 평양철도대학 담장에 김 위원장을 비난하는 낙서까지 등장해 보안당국에 비상이 걸렸고 주민들 사이에도 소문이 금방 퍼졌다고 전함.
- 이 담장에는 '박정희·김정일 독재자, 박정희 나라경제 발전시킨 독재자, 김정일 사람들 굶겨 죽인 독재자'라는 낙서도 있는데 글자당 B4(257X364mm)용지 크기 정도의 큰 글씨인 데다 빨간 벽돌에 흰색 분필로 쓴 것이어서 눈에 더욱 잘 띄었다고 소식통은 전함.
 - 북한 보안 당국은 범인색출을 위해 합동 수사대를 구성해 철도대 학생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평양 주민과 외부인원에 대한 단속과 검열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또 범인의 도주를 막으려고 3일간 공무(公務) 이외 유동인구를 철저히 통제해 27일 오전까지 사흘간 기차표 발매도 중단된 것으로 전해짐.
- **"北, 가족단위 탈북에 국경경계 대폭 강화"(7/1, 오늘의북한소식)**
- 북한이 최근 형제 가족 9명이 서해로 탈북해 귀순하는 등 가족단위 탈북 사태가 발생하자 국경지대 등에 대한 '탈북경계 태세'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 1일 대북 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이 최근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409호)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15일 한 형제 가족이 소형선박을 이용해 월남하자 해당 지역 보위부원과 보안원을 보직에서 해임
 - 이 단체는 "국가안전보위부는 주민들에 대한 바다 출입증을 선별적으로 내주고 군사분계선을 넘기 쉬운 서해안에는 전마선(소형선박) 출입을 금지했다"며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도 조업에 타격을 받았다"고 전함.
 - 또 보위부에서는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 강화를 요청하는 지시문을 전국에 내려 보내는 한편 국경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 발급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중 주민 통화, 단속 피해 北휴대전화로"(7/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중 국경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에서 개통된 중국제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양국 주민이 북한제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해 위험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전함.
 - 북한 내부에 기사를 둔 대북소식지 '림진강'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에 따르면 최근 접경지역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단속대상인 중국에서 들여온 휴대전화 대신 북한 내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국과 연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北 "AP통신과 협정, 조·미관계 개선에 기여"(7/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일 최근 조선중앙통신과 미국 AP통신이 평양에 지국 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 북미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냄.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병호 사장이 이끄는 방미 대표단이 귀국했다고



전하고 "조선중앙통신사와 AP통신 사이에 협정, 협조 문건들이 조인된 것은 두 통신사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조미(朝美) 두 나라 인민들의 호상 이해(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北, 김정일 특별지시로 성병검사"(7/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보건당국은 지난 4월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성병검사를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
- 평양의 한 병원에서 비뇨기과 의사로 근무하는 서모씨는 RFA에 이같이 전하고 "성병검사라고 하면 주민들이 수치심을 갖고 검사에 응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체검사로 위장하고 소변과 혈액을 채취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매독과 임질 환자가 생각보다 많이 발견됐다"고 밝힘.
- 그는 "성병 감염은 여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많았고 남성은 부유한 간부층에서 많이 나타났다"며 "생활이 어려운 여성과 권력층 남성 사이에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
- RFA는 "북한 내부 소식통들은 최근 평양을 비롯해 신의주, 청진 등 대도시에서 성매매 알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성병 예방을 위한 대비가 없어 주민들 사이에 성병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힘.

2. 대외정세

가. 일반

● 美, 北 인신매매 최악국 재지정(6/28,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7일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국가로 재지정했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 미얀마(버마), 이란, 쿠바 등 23개 국가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
-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과 강제 결혼,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들의 공급국(source country)"이라면서 "북한 여성과 소녀들은 식량 등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지만, 거기에서 강제 결혼이나 매춘, 노동 등을 강요받는 경우에 처하기도 한다"고 전함.
-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인신매매를 문제점으로 인정하고, 열악한 경제, 사회, 정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 관행을 중지하라고 권고



나. 6자회담(북핵)

● 中, 양자·다자회담 병행카드 제시(6/28, 신화통신; 연합뉴스)

- 중국이 "관련국간 서로 모순되지 않고 병행관계에 있는 양자와 다자대화를 추진하면서 조기에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면서 이같이 말함.
- 홍 대변인은 "중국은 줄곧 유관 각측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해오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하며 유관 각측이 적극적인 대화, 접촉, 협상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
- 홍 대변인은 관영 신화통신의 기자가 최근 중국이 북한에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어떤 행동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를 확인해달라는 한 데 대해 그같이 답함.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홍 대변인의 양자·다자대화 병행 언급이 최근 북한의 남한 기피로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 재개'라는 3단계 프로세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순서에 관계없이 양자와 다자 대화를 병행해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자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연합뉴스는 전함.

● 한·일, 남북대화 우선 방침 재확인(7/1,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은 제1차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열고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대화가 우선 열려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석환 한국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북한이 핵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기로 함.
- 또한 양국은 또 한·미·일 3국간 대북 정책공조를 계속 긴밀히 유지하기로 함.
- 사사에 차관은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남북대화 이후 6자회담은 물론 다른 참가국 간 양자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힘.

3. 대남정세

● '재산정리' 北위협에 민관 29일 금강산 방북(6/27, 연합뉴스)

- 통일부는 북한이 금강산지구 내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남측 당사자들에게 오는 30일까지 들어오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오는 29일 정부 관계자와



민간 사업자들이 금강산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힘.

- 방북단 규모는 총 12명으로 정부 측에서는 단장인 통일부 서두현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비롯해 통일부 실무자 3명,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 6명이며, 민간 측에서는 현지에 투자한 현대아산 2명, 에머슨퍼시픽 1명, 금강산기업협의회 1명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1명, 대한적십자사 1명 등 6명임.
-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당국자의 방북에 대해 "금강산관광지구 내 재산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

● 통일부 "금강산 방북단 실질적 논의 못해"(6/29, 연합뉴스)

- 북한이 제기한 금강산지구 내 '재산 정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금강산을 방문한 민관 방북단은 북측과 협의방식 이견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어 이 당국자는 "방북단은 북측의 입장을 듣고 우리 측의 입장도 밝히겠다고 한데 대해 북측은 방북단 전체에 자신들의 방침을 설명하고 이후 민간사업자들과 개별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
- 이 당국자는 "북측의 일방적 통보만 받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면서 "북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으면 돌아가라고 요구해 결국 재산권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함.
- 남북 간 공방은 금강산지구 내 현대아산 사무실에서 이뤄졌으며, 북측에서는 금강산관광 실무를 총괄하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들이 나옴.
- 향후 대응과 관련해 그는 "정해진 것은 없다. 일방적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통일부 "北황강댐 방류 사전통보 못 받았다"(6/29,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북한이 이틀 전부터 임진강 북쪽의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판문점 등의 채널을 통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이 이번에 방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김외교 "北박의춘 외상과 안 만날 이유 없다"(6/30, 연합뉴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다음 달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30일 밝힘.
- 그는 남북 비핵화 회담→북미대화→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방안과 관련해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아직 유



지하고 있다"면서 "북미대화 선행에 대해서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北, 南에 내달 13일까지 금강산 정리안 요구(6/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다음달 13일까지 금강산 지역의 재산정리방안을 마련해 방북할 것을 남측 기업들에게 통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전함.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중앙통신과 문답에서 "우리 측은 7월13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측의 모든 당사자들이 재산정리안을 연구해가지고 현지에 들어올 것과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한 법적 처분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말함.
 - 대변인은 "우리 측은 (전날) 남측 기업당사자를 직접 만나 전달하려던 우리의 재산정리방안을 금강산 현지에 와있는 현대아산 등 남측기업 관계자를 통해 통지문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고 밝혀 이번 통지문이 금강산의 현대아산 사무소를 통해 전달됐음을 시사

- **통일부 "北일방조치, 투자유치에 부메랑 될 것"(6/30, 조선중앙통신)**
 -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금강산지구 내 남측자산에 대한 북측의 일방적 조치는 북측의 각종 투자유치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투자보장합의서나 현대아산과 북측 간의 계약 어디에도 일방적으로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천안함·연평도-비핵화회담 분리 거부(6/28)

- 북한은 28일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남북 비핵화회담을 분리해 대응하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거부했음.
-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너절한 잔피에 누가 속겠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천안호, 연평도 사건을 걸고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조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제동을 걸려는 역적패당의 속심은 변하지 않았다"며 남한 정부의 분리대응 입장을 "내외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잔피"라고 비난했음.
- 북한이 우리 정부의 분리대응 입장에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임. 북측의 이 같은 입장을 놓고 볼 때 남북 비핵화회담이 조기에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민주조선은 "며칠 전 괴뢰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6자회담 괴뢰대표 위성락, 돈봉투 사건으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숨어 지내던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도 저마다 미국 상전들을 찾아가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6자회담 재개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양탈질했다"고 비난했음. 신문은 "총파산 된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부동켜안고 모지름을(애를) 쓰는 이명박 패당에게 기대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음.
- 한편 최근 미국 측과 남북문제 등을 협의했던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반드시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다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다른 계기가 있을 수 있다"며 "천안함·연평도 문제가 남북 비핵화 회담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음.

● 中, 양자·다자회담 병행카드 제시(6/28)

- 중국이 "관련국간 서로 모순되지 않고 병행관계에 있는 양자와 다자대화를 추진하면서 조기에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홍 대변인은 "중국은 줄곧 유관 각측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해오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하며 유관 각측이 적극적인 대화, 접촉, 협상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홍 대변인은 관영 신화통신의 기자가 최근 중국이 북한에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어떤 행동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를 확인해달라는 한 데 대해 그같이 답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홍 대변인의 양자·다자대화 병행 언급이 최근 북한의 남한 기피로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 재개'라는 3단계 프로세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순서에 관계없이 양자와 다자 대화를 병행해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자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특히 이는 지난 24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양국의 입장을 재확인해 선(先)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과는 다른 입장으로 해석돼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중국은 지난 4월 28일 홍 대변인을 통한 정례브리핑에서도 "남북 간, 북미 간 양자 대화와 다자회담이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상호 촉진하는 관계로 병행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 밝혀, 양자 및 다자회담 병행카드를 제시한 바 있음.

● 美 "남북대화 선행 원칙 변함없다"(6/29)

- 미국 정부는 28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 재개'라는 이른바 '3단계 프로세스'에 대해 "여전히 유효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양자, 다자회담 병행 카드를 내놓은 것과 관련, "우리의 입장은 지금까지와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 눌런드 대변인은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 이후에 6자회담이 재개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제시한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도 지난 25일 하와이에서 열린 중국과의 아태사무협상에서 같은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미국의 입장은 같다"고 거듭 확인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도록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는 중국이 최근 북한의 거부로 3단계 프로세스가 불가능해지자 순서에 관계없이 양자와 다자 대화를 병행해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자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 한편 눌런드 대변인은 주한미대사 지명자인 성 김 6자회담 특사의 후임에 클리퍼드 하트 해군참모총장 외교정책 자문역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현재로서는 공식 발표가 없으나 곧 후임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2차관 "북핵문제에 단합·단호 입장 보여야"(6/30)

-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30일 "국제사회는 북한에 단합되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농농축프로그램(UFEP)을 비롯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



해야 한다"고 밝혔음.

- 민 차관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제7차 세계핵테러방지(GICNT)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UEP 추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9·19성명과 배치되는 것임을 한목소리로 선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 그는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추구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대화 노력도 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남북대화를 필수적 출발점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행동을 확보하는데 6자 회담 관련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남북대화에 응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음.

● 김외교 "포기하지 않고 北에 남북대화 설득"(6/30)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다음 달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30일 밝혔음.
- 김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내가 먼저든 그쪽이 제의하든 얼마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한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만난다, 안 만난다고 예단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회의에 같이 참석하는 만큼 가볍게 조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남북한은 2000년대 들어 ARF를 계기로 종종 외교장관 회담을 가져왔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그에 따른 대북 쌀·비료지원 유보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한 차례도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음.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유명한 당시 외교장관과 박 외상은 서로 만남을 피했음.
- 김 장관은 북한이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위해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공은 북한에 가 있는 상황이며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오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음.
- 그는 남북 비핵화 회담→북미대화→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 방안과 관련해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미대화 선행에 대해서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음.
- 김 장관은 특히 "남북대화 선행 원칙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면서 "우선 현재의 정책을 가져가면서 북한을 설득 하겠다"고 덧붙였음.

● 한·일, 남북대화 우선 방침 재확인(7/1)

- 한국과 일본은 제11차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열고 북핵 6자회담 재개



- 에 앞서 남북대화가 우선 열려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음.
-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석환 한국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북한이 핵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음. 양국은 또 한·미·일 3국간 대북 정책 공조를 계속 긴밀히 유지하기로 했음.
 - 사사에 차관은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남북대화 이후 6자회담은 물론 다른 참가국 간 양자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밝혔음.

나. 미·북 관계

● 美, 1995년後 대북지원 13억弗< CRS >(6/27)

- 미국이 지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북한에 제공한 각종 지원이 13억 달러 어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26일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간한 '대북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이듬해인 1995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은 금액으로 따져 총 13억1천28만 달러(한화 약 1조4천200억 원)로 집계됐음.
- 미국의 대북지원은 제1차 북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에도 홍수피해 복구 차원에서 60만 달러의 의약품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음.
- 항목별로는 인도적 식량지원이 총 7억815만 달러(225만8천164t)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 2009년 3월 북한이 구호단체에 대해 떠날 것을 요구한 이후에는 전면 중단된 상태임.
- 또 6자회담 합의에 따라 1억4천600만 달러 상당의 중유가 지원됐고,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립됐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EDO) 관련 비용으로 4억370만 달러, 의약품 등 각종 생필품 지원에 1천만 달러가 각각 투입됐음.
- CRS는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식량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몇 가지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먼저 지난해 작황이 비교적 나아졌으나 고질적 식량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상황이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및 권력 승계를 앞두고 식량비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또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반감이 심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고, 식량지원을 통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음.
- CRS는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느냐의 여부와 함께 안보 및 인권문제, 모니터링 확보, 중국의 대북식량 지원 모니터링 문제,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분담 등과



도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특히 이달 초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은 미국이 식량지원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국 정부와의 정책조율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CRS는 1995년 이후 2009년까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1천200만 분량으로, 이 가운데 중국(26.9%)·한국(26.5%)·미국(17.5%)·일본(10.7%) 등 4개국이 전체의 80%를 넘었다고 밝혔음.

● 美, 北 인신매매 최악국 재지정(6/28)

- 미국 국무부는 27일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국가로 재지정했음.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 미얀마(버마), 이란, 쿠바 등 23개 국가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음.
- 3등급 국가 수는 지난해 13개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리비아,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예멘 등도 포함됐음.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과 강제 결혼,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들의 공급국(source country)"이라면서 "북한 여성과 소녀들은 식량 등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지만, 거기에서 강제 결혼이나 매춘, 노동 등을 강요받는 경우에 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 보고서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많은 북한 여성들은 여러 브로커들을 거쳐 사창가나 인터넷 섹스산업에서 매춘을 강요당하기도 한다면서 중국어를 모르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 북한 당국과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부 유럽 국가 등간의 계약을 통해 해외로 보내진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 북한 정부의 '경호원들에 의해 이동과 통신이 제약당하고 감시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월급은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계좌에 넣어지며, 북한 당국은 여러 명목으로 이 돈의 대부분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 이와 관련, 보고서는 수 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 별목공으로 고용돼 있는데, 이들은 1년에 단 이틀만 쉬고, 생산 목표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 처벌에도 직면한다고 비판했음.
- 보고서는 이어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강제 노역 등에 처해지고 있으며, 송환된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얘기를 자세히 소개했음.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내용은 지난해 보고서 내용을 되풀이한 수준임.



-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인신매매를 문제점으로 인정하고, 열악한 경제, 사회, 정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 관행을 중지하라고 권고했음.
- 인신매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해 미국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라고 미국이 분류하는 나라로, 연속 2회 지정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의 해당 국가 대출에 미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반대하도록 되어있는 등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됨.

● 北 "AP통신과 협정, 조·미관계 개선에 기여"(7/1)

- 북한은 1일 최근 조선중앙통신과 미국 AP통신이 평양에 지국 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 북미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병호 사장이 이끄는 방미 대표단이 귀국했다고 전하고 "조선중앙통신사와 AP통신 사이에 협정, 협조 문건들이 조인된 것은 두 통신사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조미(朝美) 두 나라 인민들의 호상 이해(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 또 조선중앙통신 대표단이 미국에서 AP통신과 동영상문서고(자료실) 이용, AP통신의 평양 종합(대리)지국 개설, 뉴욕의 사진 전시회 공동 개최 등을 비롯한 각종 협정에 서명했다고 소개했음.
- 조선중앙통신 대표단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뉴욕에서 AP통신과 평양 종합지국 개설 등을 포함한 MOU를 맺었음.

● <국무부 컴백> 셔먼 역할 주목>(7/2)

-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 미국의 대북정책을 이끌었던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의 '국무부 컴백'이 벅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새로운 변수가 될지가 주목됨.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직에 지난 1일 지명된 셔먼의 취임 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 때문임.
- 셔먼은 클린턴 행정부 말기인 지난 1999~2001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을 역임했음.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측근으로서 북한에 유화적인 대북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임. 이 때문에 정무차관 지명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미국 내 보수파로부터 "북한에 대한 최악의 유화정책을 펼 인물" 중 한 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음.
-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2일 북한 문제를 다뤘던 셔먼의 당시 시절이 인준청문회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임. 이런 셔먼이 취임할 경우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다소간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 특히 인준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셔먼은 대북정책을 비롯한 아시아 정책을



- 국무부 내에서 권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음. 물러난 제임스 스타 인버그 부장관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얘기임.
- 그렇게 되면 국무부의 한반도 라인인 셔먼 밑에 커트 캠벨 동아태담당 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특사로 짜여 지게 됨. 일단 한두 명의 인사가 미국의 정책을 쉽게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음. 하지만 새로운 인물의 입성이 정책에 미칠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선부름.
 - 오바마 정부 출범 후 미·북 관계는 2009년 말 보즈워스의 방북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판단 착오와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으로 인해 변변한 대화조차 한 번 갖지 못한 상황임.
 - 게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정부 내에서는 한반도 상황 관리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우리나라농축 등 북한이 갈수록 핵 능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단 적절한 수준에서 북한의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제어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임.
 -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화파였던 셔먼의 국무부 복귀는 시사점이 있음. 일단 한미 양국은 지난주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의 방미를 통한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선(先)남북대화' 원칙을 재확인했음.
 - 하지만 올 여름이 지나도록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새로운 해법 마련에 나설 개연성은 이런저런 이유로 더욱 높아지고 있음.

다. 중·북 관계

● <나선·황금평 개발안' 개성공단보다 진일보>(6/27)

- 북한과 중국이 최근 체결한 나선·황금평 공동개발사업은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通)'이 유연해지고 노동시장이 생기는 등 개성공단 공동개발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보임.
- 북한과 중국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계획요강'은 지난 2000년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종합개발 계획'에 비해 투자자의 편익을 보장하는 항목이 늘고 대규모 개발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양국이 경제적인 목적뿐 아니라 정치·군사적 안정을 꾀하는 다목적성을 갖고 개발에 임하고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陳德鎰) 중국 상무부장이 공동관리위원장을 맡는 등 양국 간 협의가 깊고 넓어졌음.
- '계획 요강'을 보면 개성공단 운영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通)'이 한층 유연해진 것이 눈에 띈. 우선 양국은 '자유롭고 원활한 망(網)통신을 보장'하기로 하고 고정·이동통신망(유무선 통신망)은 물론 인터넷망과 광섬유망도 구축하기로 했음.
- 개성공단의 경우 애초 유무선통신과 데이터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는 유선통신 이용만 가능한 상태임. 개성공단이 설립 당시 교통



- 망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가 이후 당국 간 합의를 통해 4차 선 도로를 신설한 반면 나선·황금평 사업에서는 북중이 항만, 도로, 철도, 항공 등 다양한 교통망 개발을 상세하게 합의했음.
- 나선지역에는 나진항을 중심으로 선봉, 웅진항을 개발하면서 나진과 원정리·청진·두만강을 잇는 고속도로 등 도로시설도 확충하기로 했음. 나진-선봉-남양간 철도 개·보수와 중국 훈춘(琿春)으로 이어지는 철도, 청진 민용비행장 건설도 예정돼 있음.
 - 황금평 경제특구에도 현재 건설 중인 신압록강대교 외에도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으로 이어지는 2개의 출입도로를 건설하고 여객·화물 부두를 새로 짓는 등 다수의 건설계획을 세웠음.
 - 통관에서도 북한은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설비와 물자에 대한 수입관세와 특구에서 가공·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면제하는 등 특구 개발에 적극적임.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계획 요강'에는 북한에 노동시장을 개설해 기업과 노동자가 자유롭게 상호 선택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특히 눈길을 끄.
 - 북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국가에서 정해진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당국을 배제하고 중국기업과 북한 주민 간에 선택이 이뤄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음. 또 북한은 나선·황금평 지역에 중국인의 출입을 보장하고 중국인과 제3국인의 장기거주도 허용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통행도 대폭 개방했음.
 - 이처럼 북한이 개방의 폭을 확대한 것은 개성공단 설립 당시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인 한국으로부터 과도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을 기울인 것과 달리 중국과는 우호적인 관계인만큼 순조롭게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사업상 편의를 가능한 한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읽힘.
 - 양국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개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황금평·나선 특구 개발 협의를 위한 추진체계를 확실히 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
 - 북한의 실력자이자 대외경제를 전담하는 장성택과 중국경제를 이끄는 천더밍이 직접 나서 정치적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특구 공동개발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음. 개발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현대아산이 추천하는 성원으로 구성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기업 승인·등록과 건설허가 등 실무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개성공단과 대비되는 부분임.
 - 그러나 북중이 합의한 '계획요강'은 개발 의지를 과시한 선언 수준이어서 향후 북중 양국 간 합의나 법제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 <北·中 경협거점 훈춘, 변화기대에 '들썩'>(6/29)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 자치주 연지(延吉)에서 승용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훈춘(琿春) 취안허(圖們)통상구. 간간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



- 데 찾은 29일 취안허 통상구 주차장에는 20-30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음.
- 취안허와 북한 원정리를 잇는 두만강대교에서는 차량이 설 새 없이 오가며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음. 현지 주민들은 "최근 들어 원정리를 오가는 차량이 부쩍 늘었다"며 "도로 보수 공사나 라선특구 개발을 협의하려는 공무원들과 무역상들"이라고 말했음.
 - 그러면서 "훈춘이 바뀌고 있다"며 "라선특구가 개발돼 북한과 교역이 늘고 라진항을 통한 동해 항로 운항이 본격화되면 훈춘도 '두만강의 단둥(丹東)'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음. 지난 8일 라선특구 공동개발 착공식을 하면서 북·중 경제협력 거점으로 주목받는 훈춘의 주민들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음.
 - 북한과 러시아에 막혀 동해 출로가 없는 인구 25만 명의 두만강 변방 도시에 불과했지만 동해 뱃길만 가동되면 명실상부한 동북지역 물류 거점으로 변모,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한다는 압록강 유역의 단둥 못지않은 무역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믿고 있었음.
 - 훈춘 주민들은 이런 기대감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음. 올해 들어 북·중 경협벨트가 속도를 내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들 말했음. 지금은 뜸하지만 2개월 새 훈춘-라진 도로보수 공사에 쓰일 자재가 설 새 없이 북한에 들어갔고, 남방으로 운송될 훈춘의 석탄을 실은 화물 트럭들은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취안허 통상구를 거쳐 라진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임.
 - 라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창리(創力)그룹은 훈춘-라진 물자 운송을 맡을 '훈춘창리해운물류유한공사'를 설립했음. 40t짜리 화물 트럭 50대도 장만했음. 취안허 통상구로 향하는 훈춘 외곽지역에 마련된 차고에는 이 트럭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음.
 - 창리그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주민은 "매일이다시피 수십 대의 화물트럭이 석탄을 라진으로 실어나르고 있다"며 "라진항에 야적한 뒤 2만t이 채워지면 배편으로 남방으로 운송 한다"고 말했음.
 - 중국이 공기를 앞당겨 10월 완공하기로 한 훈춘-라진 도로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면 1시간 이상 소요되던 것이 30분으로 대폭 단축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석탄을 운송할 수 있으며 동북지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남방 운송도 본격화됨.
 - 라선특구 개발에 쓰일 전력을 훈춘에서 공급하기 위한 고압선 설치 공사도 최근 착수했음. 올 연말까지 완공되는 이 전력망이 구축되면 훈춘에서 6만6천kW의 전력이 송전돼 라선특구 개발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훈춘시는 보고 있음.
 - 라선특구 개발에 참여한 한 중국 기업 관계자는 "동해 항로를 확보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라선특구 개발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북한도 상당히 적극적"이라며 "이미 8가지 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되는 등 중국 기업들도 라선특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그는 "지리적 입지나 투자 매력 등의 면에서 라선은 황금평과는 비교가



안 된다"며 "투자업체가 나서지 않아 지지부진한 황금평과 달리 라선특구 개발은 도로와 전력망이 구축되면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이고 훈춘도 자연스럽게 북·중·러 3각 교역 거점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 김정일, 후진타오에 '공산당 창건 90주년' 축전(6/30)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30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국가주석에게 중국공산당 창건 90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김 위원장은 창당 90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축전을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귀 당의 전체 당원들과 중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동지적 인사를 보낸다"며 "당의 창건은 중국혁명과 중국인민의 운명 개척에서 결정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 사변 이었다"고 밝혔음.
- 김 위원장은 또 "중국공산당은 자체 실정에 맞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제시하고 광범한 대중의 창조적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짧은 역사적 기간에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를 크게 강화했다"며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를 간접 평가했음.

● 北, 5월에만 중국서 곡물 5만t 수입(6/30)

- 북한이 5월에 중국에서 5만t이 조금 넘는 곡물을 수입하는 등 올해 들어 곡물, 화학비료 수입량을 부쩍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30일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원장이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하는 북중교역 동향 중 '북한의 곡물 및 비료 수입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서 총 5만328t톤의 곡물을 수입했음. 이는 전월 대비 79.2%, 전년 동기기간보다 31.5% 늘어난 것임.
- 이에 따라 5월 곡물 수입액도 1천803만 달러로 4월보다 66.6%나 늘어났음. 5월수입 곡물은 옥수수 54.6%, 밀가루 34.5%, 쌀 10.7% 등임.
- 올해 1~5월의 수입 곡종을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옥수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쌀 비중은 감소했고 콩은 거의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권 부원장은 "북한 식량사정이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콩 수입을 줄인 것은 가격 상승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외화부족으로 옥수수와 밀가루 등의 곡물 수입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음.
- 화학비료의 경우에도 지난달 중국에서 6만7천여t을 수입하는 등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수입량을 늘리고 있음.
- 올 들어 5월까지 북한이 수입한 비료의 양은 모두 11만4천300여t으로 작년 동기기간보다 39% 늘었고 수입액은 2천300만 달러에 달했음. 북한이 1~5월 수입한 비료는 유안 10만3천493t, 요소 1만695t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요소 대신 성분 함량이 낮지만 저렴한 유안을 집중 수입한 것으로 분석됐음.
- 권 부원장은 "비료 공급 부족은 올해 이모작 농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년 이모작 농사는 지난겨울의 혹한에다 비료 부족으로



작년보다 작황이 더 나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음.

● "북-중 주민 통화, 단속 피해 北휴대전화로"(7/1)

- 북중 국경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에서 개통된 중국제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양국 주민이 북한제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해 위험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전했다.
- 북한 내부에 기지를 둔 대북소식지 '림진강'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에 따르면 최근 접경지역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단속대상인 중국에서 들여온 휴대전화 대신 북한 내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국과 연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중국 쪽과 통화를 하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중국과 밀거래를 하거나 중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인데, 중국 쪽 상대방에게 북한에서 개통된 휴대전화를 주고 북한의 전파가 닿는 국경지역까지 접근시켜 통화하도록 한다는 것임.
- 북한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돼있는 만큼 중국 쪽과 통화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단속이 불가능해 자유로운 통화가 가능함.
- 그동안 북중 간 국제전화는 중국제 휴대전화를 북한으로 반입, 함경북도 무산 등 국경 주변 수km 반경 내에서 통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음.
- 이시마루 대표는 "예전에는 중국에서 휴대전화를 들여와 중국 등지로 통화한 사실이 적발돼도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벌금을 내는 선에서 처벌이 이뤄졌는데 최근에는 단련대로 보내는 등 위험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 한편 RFA는 북한에서는 중국에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한국 쪽과 통화는 북한돈 100만원, 중국 쪽 통화는 북한돈 40만~6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고 전했다.

● 北, 中연변에 투자유치 위해 라선대표처 개설(7/1)

- 북한이 라선특구 투자 유치를 위해 최근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연지(延吉)시에 라선 대표처를 개설했다고 연변 소식통들이 1일 전했다. 소식통들은 "라선특구 공동개발 착공식 한 달여 전에 개설됐다"며 "평양에서 2명, 라선특구에서 2명 등 모두 4명이 파견됐다"고 말했다.
-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라선특구의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투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업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라선 대표처는 지난 9일 북·중 고위직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라선특구 공동개발 착공식 이후 중국 동북지역 기업들을 상대로 활발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북한 중앙당국의 승인 절차 없이도 이들이 발급하는 초청장만 있으면 라선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임. 한 소식통은 "북한의 외자 유치 전담기구인 합영투자위원회와 라선시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종전 북한에서 파견됐던 관료들과는 달리 훨씬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최근 라선을 다녀온 한 소식통도 "지난해 초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 개정되고 라선시가 특별시로 승격된 뒤 라선시 정부에 자율권이 대폭 부여됐다"며 "라선시 정부가 투자 기업의 적격성 판단이나 외자기업 인허가와 관련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소식통은 "올해 초 임명된 림경만 라선시 당책임비서와 조정호 라선시 인민위원장, 황철남 인민위 부위원장 등은 모두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북한의 무역성 출신들"이라며 "라선특구 개발과 외자 유치에 상당히 의욕적"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 김수열 전 라선시 인민위원장과 4명의 부위원장 가운데 3명을 무역성 출신으로 대거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기업, 위화도 개발 추진"〈中매체〉(7/1)

- 북한과 중국이 황금평과 함께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압록강의 섬 위화도에 대해 중국기업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경제신문 등 중국 언론이 1일 보도했다.
- 언론에 따르면 2006년 설립된 랴오닝(遼寧)위화도투자그룹은 같은 해 북한과 위화도 국제물류센터 건설 협약을 체결했으며 평안북도농촌관리위원회로부터 200만㎡ 규모의 농업용지 이용 허가도 받았다.
- 북한은 이어 같은 해 12월 위화도 개발을 담당할 동양무역총회사를 설립, 위화도투자그룹과 위화도경제합작구 공동건설 의향서를 체결했다.
- 위화도투자그룹은 지난해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북한의 초청으로 방북, 위화도에 생태농업관광구를 건설하는 한편 평양-신의주 간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하고 북한이 원하는 지역에 30만kW 규모의 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하는 등 3가지 합작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 이 업체는 위화도 개발에 대비, 단둥위화도경제기술합작유한공사와 단둥위화도물자공급유한공사, 단둥위화도건축공정유한공사 등 3개 자회사도 설립했다.
- 이 업체 장진이(張俊義) 이사장은 "위화도에 세계적인 수준의 5성급 호텔을 비롯해 3개의 호텔과 100여 채의 별장, 관광시설, 민속촌, 영화관, 골프장 등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그러나 이 업체가 언제부터 본격적인 위화도 개발에 나설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상임위원회를 열어 황금평과 위화도 경제지대 개발 계획을 추진했다고 발표했다. 북·중은 지난 8일 황금평 공동개발 착공식도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대상 착공식'으로 명명, 황금평에 이어 위화도에 대한 공동개발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 그러나 북한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6일 우선 황금평을 개발하겠다고 밝혀 위화도의 본격적인 개발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中관광객 평양-상하이 노선 여객기로 첫 방북(7/2)

- 중국 상하이(上海) 관광단이 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



- 신이 2일 보도했음. 중국인들이 이달 개설된 평양-상하이 직항노선을 통해 북한 관광에 나서기는 처음임.
- 북한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이 노선을 개통했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운항할 예정임.
 - 시천홍 상하이금강관광공사 당서기가 이끄는 상하이관광단은 4박5일 일정으로 평양의 기념물과 묘향산의 국제친선전람관, 판문점 등을 참관하고 금강산과 개성지구의 역사유적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 조성규 조선국제여행사 사장은 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금강산 등 조선의 관광명소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광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라. 러·북 관계

● "김정일, 내달 1일 러시아 방문"〈마이니치〉(6/28)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8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모스크바발 기사에서 북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의 정세 안정을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노리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경제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김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실현되면 2002년 8월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9년만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달 29일 심야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가을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관련 시설을 시찰할 예정임.
- 김 국방위원장은 7월 1일 국경을 통해 러시아로 입국한 뒤 특별열차로 이동할 것으로 보임. 정상회담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대통령 별장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는 지난 5월 정보책임자를 북한에 보내 김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러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만날 계획 없다" (6/29)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나탈리아 티마코바 러시아 대통령 공보실장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티마코바 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0일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현지에서 여러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지만, 그의 프로그램에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잡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 티마코바는 "대통령은 30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012년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헬기를 타고 APEC 정상회담에 맞춰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루



스키 섬에 건설 중인 시설과 교량 등을 시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준비되고 있는 양국 정상회담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김정일 러시아 방문, 무산 아닌 연기"(7/1)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무산된 것이 아니라 연기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블라디보스토크발 기사에서 러시아 정부 고위관계자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실제 협의 중이었다. 회담은 무산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연기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이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김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 지역인 하산에 진입한 뒤 같은 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정상회담을 위한 양측의 의제 조율이 벽에 부딪치면서 회담이 취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음.

마. 기 타

● "유니세프, 北홍수 대비 10만 명분 구호품 비치"(6/30)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올여름 북한의 홍수에 대비해 북한 내 10여 개 군에 10만여 명 분의 긴급구호품을 비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전했다.
- UNICEF 동남아시아사무소의 제프리 킬리 대변인은 방송에 이같이 밝히면서 "올여름 북한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홍수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긴급행동령'을 준비하는 등 홍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 긴급구호품 상자에는 3개월 치의 식수, 물통, 식수정화제를 비롯해 비타민A 보충제, 영양 강화 우유 등이 들어있음. UNICEF는 이밖에 홍역 예방 백신과 의료도구 등 공중보건을 위한 구호품과 숙식 해결을 위한 텐트, 방수포, 취사도구 등도 마련했음.

● 유엔, 국제사회에 대북지원 비공개 호소(7/1)

- 유엔이 전세계 회원국을 상대로 비공개 모금 설명회를 열고 대북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호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음.
- 익명을 요구한 유엔의 한 관리자는 이날 방송에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지난달 27일 전세계 회원국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세계 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대북사업을 소개하고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을 설명하며 지원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 이와 관련, 스테파니 벙커 OCHA 대변인은 "대북지원 사업이 각국의 지원규모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벙커 대변인에 따르면 대북 지원 사업은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독일, 스위스 등 유럽국가의 도움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음.
- 유엔은 올해 2억1천900만 달러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모금액은 17% 수준인 3천825만 달러에 불과함.

● 북-필리핀, 문화협정 집행계획서 조인(7/1)

- 북한과 필리핀이 1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2011~2013년도 집행계획서에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조인식에서는 북측에서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필리핀 측에서는 펠리페 멘도자 데 레온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집행계획서에 서명했음.
- 이 자리에는 김해룡 북한 인민대학습당 부총장과 에르린다 바실리오 필리핀 외무 차관도 참석했음. 북한과 필리핀은 2006년 문화협조 협정을 맺었음.

● "EU, 2008년부터 北에 3천만 달러 상당 지원"(7/2)

- 유럽연합(EU) 원조협력청이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2천240만 유로(미화 약3천254만461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2일 보도했음.
- EU는 아일랜드의 '컨선 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 영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독일의 '저먼 애그로액션(German Agro Action)'을 비롯한 6개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의 수질개선과 보건, 식량안보, 삼림조성 사업 등을 지원해왔음.
- 대북 지원 내역을 다룬 유엔 보고서(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DPRK)에 따르면 연도별 지원 금액은 2008년 744만 유로, 2009년 255만 유로, 지난해 845만 유로로 각각 집계됐고 올 들어 5월까지의 북한에 398만 유로를 지원했음.
- '컨선 월드와이드'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사업을 하고 '세이브 더 칠드런' 영국지부는 함경남도 함흥, 단천, 신흥, 영광, 정평 5개 지역에서 통합환경 보건사업과 식량안보 사업을 지원한다고 RFA는 전했다.
- 한편 RFA는 미 국무부가 다음 달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전격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전망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군 캠프캐럴 BEQ힐 조사...오염물질 검출(6/28)

- 미군이 현재 한미 공동조사가 실시 중인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 내 41구역과 D구역 외에 'BEQ(독신자 숙소)힐' 지역에 대해서도 2009년부터 작년까지 오염물질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군은 자체 수질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클로로포름과 톨루엔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지만 당장 인체에 크게 해가 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음. 28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에 따르면 미군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캠프 캐럴 내 BEQ힐 지역에 대한 오염물질 조사를 실시했음.
- BEQ힐 지역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41구역 및 D구역과 떨어진 곳으로, 캠프 캐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음. 캠프 캐럴에서 1960년대 말부터 33년간 군무원으로 근무한 뒤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구자영 씨가 독극물 추가매물 지역으로 지목한 곳이기도 함.
- 이 보고서는 구 씨의 증언을 토대로 BEQ힐 지역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해 만든 것으로, 지난 2월 미 극동사령부 육군 공병단이 작성해 미 육군 대구기지 사령부에 제출했음.
- BEQ힐 지역 3곳에 대한 수질오염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는 발암물질인 클로로포름과 톨루엔이 각각 1.9mg/l , 5.1ug/l 검출돼 환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두 가지 성분 외에는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음.
- 보고서는 "BEQ힐 지역의 오염은 내버려둘 경우 당장 인체에 큰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지하수와 직접 접촉하는 건설 노동자는 건강 및 안전을 위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홍희덕 의원은 "보고서는 정화대책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보고서가 작성된 2011년 2월까지 화학물질 매립 폐기물이 제거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음.
- 홍 의원은 "현재 한미 합동조사단은 D구역과 41구역을 중심으로 시굴조사를 할 계획이다"면서 "BEQ힐 지역을 포함해 미군부대 기지 전역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美 "2010년 조사 때 고엽제 발견 안 돼"(7/1)

- 경북 칠곡 미군 기지 '캠프 캐럴' 내에서 가장 최근 실시된 토용 및 지하수 오염조사에서 고엽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미군 측이 공식 발표했음. 미8군은 1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0년 (조사를 토대로) 몇 개의 별도 초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음.
- 초안 보고서 중 하나는 캠프 캐럴 내 헬기장 지역에서 채취한 26개의



- 토양 샘플에 관한 데이터를 담고 있음.
- 미군은 이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고엽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인 2,3,7,8-TCDD는 검출되지 않았고 기타 다이옥신의 경우 극미량이 검출됐다고 밝혔음. 그러나 보고된 모든 수치는 미 환경보호국이 정한 안전수치보다 현격히 낮았다고 미군 측은 강조했다.
 - BEQ(독신 부사관숙소) 힐(Hill)과 41구역에 관한 초안 보고서에서도 고엽제와 관련된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미군 측은 설명했다.
 - 미군은 "보고서는 캠프 캐럴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국 및 한국인 직원들과 부대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확실한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음. 다만 일부 예상과 달리 해당 보고서들이 8월까지의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미군 측은 전망했음.
 - 2004년의 삼성물산이 작성한 용역보고서에서 2,3,7,8-TCDD 검출 사실이 기록된 것과 관련해 미군은 "27개의 토양 샘플과 4개 지하수 샘플 중 단 한개 토양샘플에서 2,3,7,8-TCDD가 검출됐다"면서도 "모든 토양과 지하수 샘플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의 양은 전 세계 어떠한 공장지대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극미량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이 역시 미 환경보호국 안전수치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조사 샘플 중 어디에서도 고엽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미군 측은 밝혔음.
 - 미군은 "현재 한미 공동조사단은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매몰됐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면서 "초기에 실시한 지표투과레이더(GPR), 전기비저항탐사(ER), 자기 탐지기 결과가 캠프 캐럴 내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필요하다면 어느 곳을 시험할지를 결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음.

● '캠프캐럴' 고엽제 의혹 이번 주 밝혀진다(7/3)

-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몰 의혹 조사를 벌이고 있는 한미 공동조사단이 이번 주 중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함. 3일 한미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양국은 오는 6~7일께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를 개최, 캠프 캐럴 공동조사 중간 결과를 공개함.
- 공동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분과위에서 캠프 캐럴 내 헬기장 구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음. 헬기장 구역은 이번 고엽제 매립 의혹이 촉발된 곳임. 전역 미군 스티브 하우스 씨는 지난 5월 미국 TV 인터뷰에서 "헬기장에서 가까운 기지 뒤쪽에 드럼통을 묻었다"고 밝힌 바 있음.
- 한미 공동조사단은 현재 헬기장과 D구역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전기비저항탐사법(ER) 등 지구물리탐사를 완료했으며 41구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음.
- 이 관계자는 "GPR 조사 등이 끝나도 이를 분석하는데 1주일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분석이 완료된 헬기장 지역에 대한 결과를 우선 발표하고 나머지 지역도 완료되는 데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동조사단은 이달 중 캠프 캐럴에 대한 지구물리탐사 및 분석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일단 헬기장 지역은 하우스 씨와 국내의 캠프 캐럴 퇴직자들이 고엽제 매몰 의혹 지역으로 잇따라 지목한 곳인데다 이번 한미 공동조사에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발표 결과가 주목됨.
-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헬기장의 경우 금속성 여부를 가려내는 마그네틱 탐사에서는 별다른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땅속 토양상태를 파악하는 GPR과 EIR 조사에서는 일부 지점의 밀도 등 이상한 점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음.
- 다만 미군이 지난해 실시한 최신 조사에서는 고엽제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중간 조사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중간 조사 결과와 함께 한미 양국은 이번 환경분과위에서 추후 실시될 토양 오염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임.
- 양측은 지구물리탐사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토양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음.
- 미군은 의심 결과가 나타날 경우 땅에 2인치 정도의 가는 관을 박아서 샘플을 채취하는 토양시추조사(coring)를 우선 실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정부는 아예 땅을 파는 시굴조사(exploratory trenching)를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번 환경분과위에서는 토양 오염 조사 방법을 두고 양측 간 격론이 벌어질 예정임.

나. 미·중 관계

● 美-比, 남중국해 분쟁 외중에 합동해군훈련(6/28)

- 남중국해상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필리핀이 28일부터 분쟁 수역 인근에서 합동 해군훈련을 시작했다고 GMA 뉴스 등 필리핀 언론이 보도했음.
- 언론은 11일 동안 실시되는 이 훈련(CARAT)에 미 해군에서는 정훈함(Chung Hoon)과 하워드함 등 알레이 버크 급 이지스 구축함 두 척과 해양 구조선 셰이프가드 등 태평양함대 소속 함정 세 척이, 필리핀 해군에서는 초계정 두 척이 각각 참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양국은 각각 태평양함대와 서부함대 이름으로 된 보도 자료를 통해 훈련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훈련의 미국 측 사령관인 데이비드 웰치 대령은 "양국 해군은 오랫동안 합동훈련을 해왔다"면서 "이런 합동훈련은 기량을 배양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음.
- 그러나 양측은 이 훈련이 남중국해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을 애써 강조하고 나서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였다.
- 필리핀 해군은 "이번 훈련은 지난 1951년 체결된 양국 방위조약에 따른



활동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서부방면군 사령관인 후안초 사반 중장도 이번 훈련은 난사군도 영유권 분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다.

- 그러나 정치학자인 베니토 림 아테네오 데 마닐라대학 교수는 "이번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이 여전히 긴밀한 우방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사례로 중국도 이 사실을 잘 인식하길 바란다"면서 "필리핀으로서도 이번 훈련이 외교적 해결책 모색에 큰 힘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지적했음.
-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미국을 방문한 아베르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과의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필리핀의 방어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해 필리핀을 지원할 뜻을 분명히 밝혔음.
- 클린턴 장관은 필리핀 측이 낮은 해군 전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고, "이는 (필리핀에) 적절한 물자와 장비를 제공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뜻 한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이어 미국이 필리핀에 필요한 물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할 방법을 알아보고자 양국이 협력할 것이라며 델 로사리오 장관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리들과 회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中, 美상원 中규탄 결의에 거부감 표시(6/28)

- 중국이 유관국간에 대화를 통한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재차 강조하면서 미 상원의 대(對) 중국 규탄 결의안에 거부감을 표시했음.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뜻을 피력했음.
- 홍 대변인은 미 상원이 현지시간으로 27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합선을 이용한 무력사용을 한다고 규탄 결의안을 낸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미 상원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 유리한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그는 그러면서 "남해(남중국해) 분쟁의 핵심은 유관 국가들이 난사군도 일부 도서를 놓고 벌이는 주권 분쟁으로, 이는 당사국들 간에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남해에서 항해 자유는 쟁의 대상이 아니며 그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해상에서의 항해 자유와 상업 활동의 자유보장을 주장하는 미국과는 아무런 다툼이 없다는 점을 시사했음.
- 홍 대변인은 아울러 "남해 쟁의는 당사국들 간의 문제이며 비당사국은 당사국들 간 대화와 평화적 해결 노력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음. 이는 미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불(不)개입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됨.

● 中 "美 첨단기술 수출제한 여전" 맹공(6/29)

- 중국이 미국에 첨단기술 제품 수출제한을 강하게 비판했음. 중국 상무부는 29일 야오젠(姚坚)대변인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미국이 중국에



- 대한 수출제한을 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음.
- 중국 상무부의 이런 반응은 미국 상무부가 27일 '전략무역허가예외규정'을 발표하면서, 면허예외 및 전략무역 승인 44개국에 중국을 포함시키지 않은데 대한 대응으로 나왔음. 중국은 그동안 미국에 첨단기술 제품 수출 제한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해왔음.
- 야오 대변인은 "미국이 고수하는 수출제한 정책은 중·미 양국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호혜협력 동반자 관계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에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 이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역조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첨단기술 제품 수출제한을 지속해 중국 기업의 해당 제품 수입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했음.
- 그는 그러면서 "중국 해관에 따르면 올 들어 1~5월 중국과 미국의 무역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22.3%가 늘어난 1천695억2천만 달러에 달하고 이 기간에 미국은 65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면서 "그럼에도 첨단제품의 중국 수입은 늘지 않았다"고 역설했음.
- 야오 대변인은 "중국의 시장은 광활해 미국 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첨단제품 수출제한 정책은 양국 무역 발전을 제한할 뿐더러 미국 기업 이익과 미국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해가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음.
- 미국은 국제우주정거장 관련 핵심 전자부품, 고성능 카메라 관련 부품, 상업용 항공기의 네비게이션 시스템, 공항 스캐너 등의 첨단제품 3천여 가지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에 수출을 제한하고 있음.

● 中 "美합참의장 내달 9~13일 방중" 확인(6/30)

- 미국의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이 다음 달 9~13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가 30일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음. 양위쥘(楊宇軍) 국방부 대변인은 멀린 합참의장이 지난 5월 중국 인민해방군의 천빙더(陳炳德) 총참모장의 방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방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양 대변인은 양측이 현재 구체적인 방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참모장은 지난 5월 15~22일 방미에서 멀린 합참의장과 회담하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 이어 톰 도널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한 바 있음.
- 따라서 멀린 합참의장도 이번 방중 기간에 천 참모장과 회담하고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과 다이빙궈(戴秉國)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 멀린 합참의장이 중국의 핵미사일과 재래식 미사일을 통합 운영하는 제2포병 부대를 포함해 중국의 첨단 군사시설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음.
- 미국이 작년 초 대만에 64억 달러 상당의 첨단무기를 판매기로 결정하는데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1년여 양국 군 고위층 간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됐었음.



- 그러다가 올 들어 지난 1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중과 같은 달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미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개최 후 미·중 간 군사교류도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음.

다. 미·러 관계

● 〈美에 스파이 팔아넘긴 러 장교에 징역 25년〉(6/27)

- 미국 측에 자국 스파이망 정보를 넘긴 러시아 고위 정보당국자에게 2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27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 군사법원은 지난해 6월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비합법 정보요원들의 신상을 미 정보당국에 넘겨 이들이 체포되게 만든 혐의를 받은 전(前)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소속 대령 알렉산드르 포테예프에 대한 궤석 재판에서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음.
- 포테예프에 대한 재판은 그가 미국으로 탈출하기 직전까지 SVR에서 고위 장교로 근무했기 때문에 군사법정에서 이루어졌음. 재판은 포테예프가 미국으로 도주해 미 정부의 보호 아래 있는 상태여서 궤석재판으로 진행됐으며 기밀 정보와 관련된 증언 청취를 이유로 일반인의 방청이 금지됐고, 기자들은 선고 때만 취재가 허용됐음.
- 포테예프에게는 국가기밀 유출에 따른 반역죄와 미국으로 무단으로 도주한 데 따른 탈영죄 등이 적용됐다. 법원은 동시에 포테예프의 대령 계급과 그동안 받은 훈장과 메달 등을 모두 박탈했음. 재판정에는 일반 경비원들 외에 특수부대 요원들이 배치되는 등 높은 경계 태세가 취해졌음.
- 재판 후 검찰은 선고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으나, 포테예프 변호인단은 최고법원에 상고(上告)하겠다고 밝혔음.
-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옛 국가보안위원회(KGB)의 후신으로 대외정보를 취급하는 SVR 비합법정보요원실의 미국과 차석으로 일한 포테예프 대령은 지난해 6월 미국으로 도주해 미 정보 당국에 현지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비밀 정보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넘겼음. 그는 도피 전에 먼저 딸과 아들을 미국으로 탈출시켰으며, 그의 아내는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포테예프의 밀고로 미 당국은 6월 말 국내에 머무는 러시아 스파이 11명을 체포했고 같은 해 7월 이 가운데 10명을 미국 정보원으로 일하다 붙잡힌 러시아인 4명과 맞교환했음. 이 사건은 냉전 이후 미-러 간에 이뤄진 최대의 스파이 맞교환으로 주목을 받았음.
- 대외정보국 관계자는 지난달 현지 신문 이즈베스티아와의 인터뷰에서 포테예프가 2만~3만 달러를 받고 배신을 저질렀다고 밝혔음.

● 〈美오케스트라, 22년 만에 러시아 무대 선다〉(6/28)

- 세계적인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가 이끄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CSO)'가 구(舊)소련 붕괴 후 22년 만에 미국 관현악단으로서는 처음으로



- 로 러시아 공연에 나설 계획임.
- 27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지난 1990년 6월 최초로 구소련에서 공연을 한 바 있는 CSO는 이날 "내년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구 레닌그라드)에서 공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 CSO의 이 공연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며 미 국무부는 올해부터 1년여에 걸쳐 진행되는 '아메리칸 시즌 인 러시아(American Season in Russia)' 문화 축제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으로 이를 후원함.
 - 존 베일리 주러시아 미국 대사는 "미국과 러시아가 민간 차원에서 개선된 관계를 구축해가는 것은 양국 정부가 발전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CSO는 러시아에 소개하고 싶은 미국 최상급 문화의 정수"라고 강조했다.
 - 러시아에서 열리는 미국 문화 축제는 28일 '앨빈 에일리 아메리칸 댄스 시어터(Alvin Ailey American Dance Theater)'의 공연으로 시작되며 이외에도 컨트리 가수 메리 맥브라이드 공연, 애니 레이보비츠 사진전, 민속음악 연주회 등이 계획되어 있음.
 - CSO 드보라 러터 회장은 "지난해 6월 정식 초청장을 받았으나 외교 절차를 밟고 관련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데 수개월이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러시아 방문 공연 지원금을 모으는 일과 모두가 공연 일정을 잡는 일 이었다"면서 "이번 공연이 현실화하는 데는 베일리 대사의 끈질긴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 CSO는 러시아 공연을 위해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공연을 2013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음. CSO는 러시아 공연 이후 지휘자 무티의 고향인 이탈리아로 이동, 로마, 나폴리, 브레시아, 라베나 등에서 공연할 계획임.
 - 베일리 대사는 "CSO의 국제적 위상과 음악감독 무티의 명성이 CSO를 러시아 공연단으로 선정한 핵심 요인 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과 오바마 대통령이 시카고와 끈끈한 인연을 갖고 있는 것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 클린턴 장관은 시카고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시카고 북서부 교외에서 자랐고 오바마 대통령은 시카고에 자택을 두고 있음.
 - CSO는 지난 1990년 11월 당시 음악감독을 맡고 있던 게오르그 솔티 경(卿)(1912-1997)의 오랜 열망의 결실로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에서 공연을 가진 바 있음.
 - 당시 공연에 참여한 스티브 레스터(CSO 31년차 베이스리스트)는 "러시아 문화의 중심지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CSO가 다시 공연하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20년 만에 러시아 사회의 변화상을 살펴보는 일도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기대했음.



라. 중·일 관계

● 日외상 내달 3~4일 방중.. 동중국해 가스전 논의(6/29)

-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이 내달 3~4일 방중해 중국 측과 동중국해 가스전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인민일보 인터넷판이 29일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음.
- 마쓰모토 외무상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5월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때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별도로 만나 정부 요인 간 교류를 전면적으로 재개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임.
- 일본 외무상의 중국 방문은 작년 8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이 중일 고위 경제대화 참석차 중국을 찾은 데 이어 1년 만임.
- 마쓰모토 외무상은 방중 기간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을 만나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문제,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됨. 마쓰모토 외무상은 양 부장 외에도 다이빙궈(戴秉國)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원 총리의 면담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日 간 총리 10월 중국 방문 검토"(7/3)

- 8월 퇴임설이 나도는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오는 10월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간 총리는 신해혁명 100주년인 10월 10일께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면서 중국 측과의 일정 조정을 지시했음.
- 이는 간 총리가 민주당 집행부나 야권의 기대처럼 연장 정거국회가 끝나는 8월 말이나 9월초 퇴진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됨.
- 일본 정치권은 간 총리가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올해 국채발행을 위한 특별공채법안이 처리된 뒤인 8월 말이나 9월초 퇴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간 총리는 퇴진 조건으로 2차 추경안과 특별공채법안 외에 발전회사가 자연에너지 발전을 사들이는 재생에너지법안의 국회 처리를 내걸고 있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 자신의 퇴진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산케이신문은 "간 총리가 10월 방중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 때까지 계속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는 야권은 물론 민주당으로부터 반발을 불러 정국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음.

마. 기 타

● 정부, '동중국해 대륙붕' 정식문서 연내 유엔 제출(7/3)



- 정부가 한·중·일 3국 간 논란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해 한국의 공식입장을 담은 정식문서를 올해 안으로 유엔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이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내연해온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을 둘러싼 3국 간 분쟁이 표면화될지 주목됨.
- 정부의 한 당국자는 3일 "현재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정식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작성 중에 있다"면서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유엔에 정식으로 정보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 올해 연말쯤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정식문서에는 기존의 입장대로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12일 정식문서가 아닌 예비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음.
- 정부가 당시 제출한 대륙붕 경계 예비정보는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으로 면적은 총 1만9천km²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도 예비정보에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를 오키나와 해구로 연장시키고,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이어도에 대해 자국의 대륙붕이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음.
- 일본은 오키나와 해구에 훨씬 못 미치는 중국, 한국과의 중간선(양국 해안선에서 같은 거리)을 대륙붕 경계로 삼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9년 당시에는 태평양 7개 수역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했으며 한·일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일명 제7광구)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정부가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정식 문서를 제출할 경우 중국과 일본 역시 각자의 입장을 담은 정식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 3국간 분쟁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커 보임.
- 정부 당국자는 "대륙붕 경계획정의 최종적 해결은 양국 간 해양경계 획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정부는 최대한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해양경계 획정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음.
- 정부는 올해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과 한·중 해양경계획정회담 국장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대륙붕 경계획정 정식 문서 제출 방침을 발판으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됨.
- 동중국해 대륙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하고 있어 '아시아의 페르시아만 걸프'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세 나라가 주장하는 경계가 서로 겹쳐 있음.